

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(4.20) 모두말씀

[가계부채 동향]

- 가계부채는 '15년 이후 지난 2년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
 -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,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
 - 반면,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,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월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였음
- 3월초부터 ①2금융권 특별점검 실시(금감원, 105개), ②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(3.13), ③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확대, ④상호금융권 주무부처에 대한 협조요청(3.16, 부위원장 주재)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음
 - 그 결과 오늘 발표된 금감원의 가계부채 동향(속보치)을 보면 올해 3월부터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
- 다만, 4월 이후 이사철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, 당국 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
 - 특히, 향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시중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,
 -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증가속도 관리는 가계 상환능력 측면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

[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]

- 금융위원회는 금감원, 협회, 금융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금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수로 반드시 관리할 계획
 - 전 업권에 걸쳐 금융회사들이 당초 자체 계획한 금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
- 또한,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음
 - 가계대출의 고정금리·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높이고, 전업권·전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
 -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과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「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」도 2분기중 마련하겠음
- 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과정에서 흑여 서민 등 취약계층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,
 - 사잇돌대출,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영업 등으로 시장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도 활성화시키겠음
 -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자영업자 대출 미시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컨설팅, 정책자금 공급, 폐업·전직·재창업 지원 등 자영업자 대상 종합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

[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]

- 아울러,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고자 함

□ 그간 협회, 금융권, KDI 등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
同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

① 최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
관리■ 강화

-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(가칭)
‘가계대출 119프로그램’을 전 업권에 순차적으로 마련
- 비자발적 실업, 폐업, 병환 등 일시적으로 상황이 곤란한
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
-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맞춤형 상담·지원을 위해 금융회사가
소득, 주소지 등 차주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관리

② 금융회사가 연체금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고, 투명하게
공시·설명하도록 유도하여 차주 보호를 강화

- 대출금리에 이어 연체금리에 대해서도 산정기준, 내부통제
장치 등을 담은 ‘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’을 전 업권에 마련
- KDI 연구용역 결과(2분기), 공청회, 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
필요할 경우 연체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추가 개편을 검토

③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한 보호 노력도 한층 강화

- 금융회사가 연체차주 거주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
전에 반드시 차주와 상담
- 서민층 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주 신청시 금융회사가
경매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토록 하고,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
-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하여
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담보물 매매
종합지원 프로그램(신복위·캠코)’을 마련

[당부말씀]

□ 오늘 확정하는 「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」은 기본
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향후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
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

- 협회와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
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부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
당부드림

□ 마지막으로 금융권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
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, 서민층 차주에 대한
부담완화를 추진해 주길 바랍

-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금융회사 수익성에 영향을
미칠 수도 있지만,

- 중장기적인 시계로 넓게 볼 때는,

-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 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 본연의 책무
이자 건전성 유지를 위한 ‘기본 중의 기본’이며,

- 차주에 대한 보호 노력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객충을
확대하는데 있어 ‘가장 최선의 길’임을 다시한번 유념해
주시기 바랍